

손학규 “민생·통합 대통령 되겠다”

민주 ‘빅3’중 첫 대선출마 선언...야권 대선 혈투 점화

문재인 17일·정세균 24일·김두관 7월께 출정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손학규 전 대표가 14일 야권 ‘빅3’(문재인·손학규·김두관) 가운데 처음으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야권 대선주자 간 경쟁이 시작됐다.

손 전 대표에 이어 문재인 상임고문이 17일, 정세균 상임고문이 24일 출마선언을 예고한 상태며 김두관 경남지사도 7월께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은 급속하게 대선 경선 국면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민생정부, 함께 살자는 대한민국”을 모토로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표를 던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른바 ‘손학규 브랜드’인 민생 대장정과 민주화운동 과정 등에서 만났던 전국의 광범한 시민 100여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장성의 농민 이장 부부, 강원도 속초의 어부, 마산 어시장의 상인, 대학생, 청년 실업자 등으로 각계 각층에서 초청됐다.

또 이날 출정식에는 이낙연·김동

철·김우남·신학용·양승조·오세재·조정식·이찬열·이춘석·최원식 의원과 김영춘·서종표·송민순·이성남·전혜숙·홍재형 전 의원 등 손학규계 전직직 의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 명씩 전 대표와 문화상·이미경·원혜영·유인태·신장용·유대운 의원과 천 장배 전 의원도 나와 손 전 대표를 응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사회통합·남북통합·정치통합으로 ‘3통의 대한민국’을 열겠다”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애민 대통령’,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민생 대통령’,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통합대통령’을 손학규가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 혈관 속에는 민주·민생·통합의 피가 흐르고 있다”며 “낮은 자세로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소통하는 소통령,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산층을 넓히는 중통령, 국민통합과 남북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손 전 대표는 나아가 “이제 민주주의의 대전환, ‘민생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구체적인 공약으로 ▲2020년까지 70% 이상의

고용률 달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병원비 부담 상한 100만원으로 하향 ▲학교혁신 시스템 도입 ▲서울 대와 거점 지방국립대의 공동화위제 실시 ▲정부책임형 사립대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출마 선언 직후에 100여명의 시민과 함께 손을 잡고 광화문광장을 돌며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손 전 대표의 이어 경기도 화성시 송림동 가뭄현장으로 달려가 민생 현장에서 본격적인 대선행보의 첫 발을 내디뎠다.

손 전 대표에 이어 오는 17일 출마 선언을 하는 문 상임고문은 출마선언문에 담을 내용을 다듬는 한편 비노(비노무현) 세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애작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출간기념회 등을 통해 사실상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김두관 경남지사는 지사 임기 절반을 마치는 7월이 돼야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총선에서 중도에서 당선되며 전북에서 수도권으로 반경을 높인 정세균 고문은 오는 24일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선 레이스에 가세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분권 실현 확고한 정책대안 마련을”

영·호남 시민토론회, 19대 국회·대선 주자들에 촉구

광주YMCA·광주 경실련·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분부는 대선을 6개월 앞둔 14일 ‘2012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영호남 공동선언문’을 채택·선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광주YMCA 백제실에서 ‘제1회 영·호남 지방분권 시민토론회’를 연 뒤 서로 출마한 제19대 국회와 대선 주자들에게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정책 대안과 실천의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선언문을 선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방분권 선언 10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20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며 “지방자치는 아직 ‘2할 자치’에 머물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 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분권·자치제도를 왜곡하거나 제도개혁을

거부함으로써 분권과 자치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해오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면’ 시혜적 분권으로 일관해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영·호남의 연대로 범국민적 사회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영·호남 지방분권운동협의회’ 구성과 영호남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대선 주자들에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극심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과 기본 의제를, 19대 국회와 여야 각 정당은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실천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실현되지 않는 지방분권 정책과제 중 주요 과제에 집중해 남은 임기 중 실천하고, 이미 추진중인 관련 정책의 미비점은 실효성 있게 보완할 것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역 권역별 명문대학 육성 의제, 지방분권형 개헌 의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비롯한 정치분권 의제, 재정분권의 확대 등에 집중해 2012년 대선 정책의제도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광주대 류한호 교수(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 대표)가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광주·전남 지방분권운동의 방향과 전략 모색’을, 부산대 황한식 대학원장(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이 ‘대선시기 지방분권국가 실현 의제와 실천전략’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김기홍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과 최봉의 공동체 모다 대표, 정민근 광주시 창조도시기획조정실 기획관, 김영식 부산시 기획재정관, 이인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사무처장, 이창용 지방분권국민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등이 토론을 벌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방위 등 3개 상임위 관련 국조수용팬 위원장 요구 철회”

민주 우원식 원내대변인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원구성 지연과 관련해 “우리가 위원장 1석을 요구한 3개 상임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이런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문방위, 국토위, 정무위 중 한곳의 위원장을 요구한 것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혹규명이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수장학회 및 방송사파업(문방위), 4대 강 합참 및 매쿼리 특혜의혹(국토위), 민간인 불법사찰 및 박지만씨 저축은행 연루 의혹(정무위)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들 위원회 위원장 1석 요구 철회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제 새누리당이 양보할 때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일도 하지 않고 자리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6·9전대 특정집단 특혜 준 고무줄 경선”

민주통합당 추미애 대선후보

경선준비기획단장은 14일 6·9전당대회에 대해 “정책대의원·모바일 이종투표자가 특정 집단에 소속돼 있었고, 그 특정 집단에 처음부터 특혜를 주는 등 불공정하게 고무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된 이종투표자는 친노(친노무현) 성향이 강한 ‘국민의 명령 백만민단’ 소속으로 알려졌다.

추 단장은 “한국노총의 경우 수십년간 존재했던 집단이어서

기존 정책 관철을 위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개인 정치를 지지하기 위해 활동한 집단에 대해서도 정책대의원을 배정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바일 투표 참여가 적었는데 억지로 호객행위를 하다가 참여를 유도하다 보니 관리도 느슨하게 된 것”이라며 “대선경선기획단은 이런 부정적인 요소까지 미리 예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지도부, 오늘 非朴 회동 경선 틀 논의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 대선주자들이 경선 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15일 비박측과 회동을 갖고 경선 틀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위에서 당 지도부가 대선 예비주자 본인인데 대리인인 직접 만날 것을 결의했다”면서 “대부분 최고위원이 황우여 대

표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병수 사무총장과 (비박주자) 대리인들이 내일(15일) 만날 것”이라며 “이 자리엔 황 대표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경선 틀 논의구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계 친박계는 ‘최고위 산하기구’, 비박계는 ‘별도 기구’를 각각 선호하는 가운데 최고위 산하에 경선기획단을 설치해 정점을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또 이번 대리인들과의 만남에서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등 비박계 주자들의 회동 일정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이미 비박 주자들과 전화 통화를 했고 이날 오전엔 이재오 의원과 직접 전화통화를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카드대금 “즉시결제”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모든가맹점 카드매출을 1시간 이내로 입금해 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카드체크기 포스 그대로 사용 가능

사용가맹점

주유소, 할인마트, 호텔, 모텔, 학원, 편의점, 음식점, 유류업소, 각종제인점, 식당, 종교차시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 모든카드사용 가맹점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지정점 062-368-6364

대리점 모집 (전라권)

이형만 장학생모집

재단법인 이형만 향우장학재단은 재광 영광군향우회 가족 중에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광주시 관내 거주 시민으로 중, 고등학교 ~ 대학생
 - 단, 2011년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된 자에 한함
 -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수, 개인상환 등 고려
- 선발예정인원
 - 광주시 11명(중학생 0명, 고학생 0명, 대학생 0명)
 - 영광군 11명(중학생 0명, 고학생 0명, 대학생 0명) 총 22명
-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기타서류 : 통장사본(본인명의)
- 선발일정
 - 서류접수 : 2012. 6. 18(월) ~ 7월 13일(금)
 - 최종선정 : 2012. 8월 중순경 발표(2012년 장학회보 3호에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중서 수여식 : 2012. 9. 5. 영광군민의 날(예정)
 - (※ 최종 선정된 장학생 개별통지 또는 회보에 발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접수(7월 13일까지)
 - 신청 및 문의처
 - 광주, 서구 화정동 404 영주체육관 117호, 사무총장 강 대 의 www.edaynews.com나 http://cafe.naver.com/yeonggwangwang을 통해 먼저 발표됩니다.
 - yug42@naver.com/edaynews@paran.com으로 장학신청 접수 환영합니다.
 - T. 010-4192-5182 / 062-673-0419
 - 신청양식 : 신청서 상단 우측 별도 양식 참조
-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단, 영광군민은 영광군청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광주시민가족은 향우장학회 사무처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2고단 868	유한회사 노형회	도로법위반
2012고단 874	신홍화물자동차 합자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957	주식회사 정현통	도로법위반
2012고단 964	유한회사 이천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036	아시아나특수화물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044	고려특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071	유한회사 노형회	도로법위반
2012고단 1085	동진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093	유한회사 이천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104	유한회사 대성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1113	유한회사 이천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126	아시아나특수화물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 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2년 5월 4일

판사 정지선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2고단 1027	유한회사 이천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042	유한회사 광신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069	유한회사 노형회	도로법위반
2012고단 1091	유한회사 이천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102	해동물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111	유한회사 장산통	도로법위반
2012고단 1117	유한회사 이천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124	아시아나특수화물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132	유한회사 광신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 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2년 5월 7일

판사 허양윤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2고단 1168	고려특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175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210	유한회사 노형회	도로법위반
2012고단 1219	유한회사 이천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229	유한회사 대성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1241	아시아나특수화물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246	유한회사 호남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 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2년 5월 11일

판사 허양윤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2고단 572	유한회사 정계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88	유한회사 광신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293	유한회사 광신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353	창조로지스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394	주식회사 삼일	도로법위반
2012고단 400	창조로지스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57	창조로지스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59	창조로지스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65	유한회사 옥천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522	유한회사 옥천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527	유한회사 정계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530	중원물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538	창조로지스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544	유한회사 옥천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554	중원물류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동원화물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 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2년 5월 16일

판사 최철민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2고단 782	유한회사 옥천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815	유한회사 노형회	도로법위반
2012고단 821	유한회사 노형회	도로법위반
2012고단 827	대영화물 유한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867	유한회사 노형회	도로법위반
2012고단 873	대영화물 유한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956	주식회사 통일특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969	유한회사 이천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021	유한회사 이천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028	유한회사 이천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035	아시아나특수화물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043	고려특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070	유한회사 노형회	도로법위반
2012고단 1075	대영화물 유한회사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 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2년 5월 17일

판사 김중석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2고단 77	유한회사 삼일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84	유한회사 광신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90	신성중기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10	유한회사 광신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244	유한회사 한물특수상운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 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2년 5월 4일

판사 이탄희